

# 환경정책 성과평가와 향후과제



문 정 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 02-2110-7940 jungho1113@me.go.kr

- '81. 4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 '92. 6 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실
- '96. 7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장
- '98. 5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장
- '99. 12 환경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 '01. 9 환경부 공보관
- '02. 8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 '03. 6 국외훈련 파견(미 노스캐롤라이나대)
- '04. 7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05. 8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 '06. 3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 '06. 6 (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우리나라는 OECD로 부터 지난 1997년부터 지난 9년간 한국정부가 이행한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최근 OECD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높은 인구밀도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높은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기, 물, 폐기물 등 오염관리 분야에서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물기반시설에 대한 2조원의 대규모 투자, 청정연료 공급 등에 의한 아황산가스 배출량 저감(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 및 쓰레기 종량제 등에 의한 생활쓰레기의 재활용 증가에 대하여 호평하였으며, 정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수립한 4대강 유역관리제도는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크할 가치가 있는 사례라며 높이 평가하였다.

OECD의 환경성과평가 작업은 동 기구가 회원국들의 환경성과 개선을 위해 행하는 "동료평가(peer review)"의 성격을 지니지만, 대부분 선진국으로 구성된 OECD내에서 선진국의 눈높이에 맞는 평가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평가받는다라는 것은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선진적 제도도입, 가시적 성과를 보여준 점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위상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OECD의 환경성과평가는 지난 2001년 OECD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한, "OECD 21세기 첫 10년 환경전략 보고서"의 5대 정책목표에 따라 그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5대 정책목표는 단순한 오염물질 제거, 오염원 관리를 고전적 환경정책을 뛰어넘는, 선진적 환경정책의 근간을 담고 있는데 "효율적인 자연자원 관리에 의한 생태계의 건전성 유지", "경제성장과 환경훼손과의 연계차단",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개선 : 환경지표의 활용", "사회와 환경의 조화", "상호의존적인

지구환경-관리구조 및 협력증진" 이 그것이다.

OECD는 5대 목표의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행평가수단을 구축하였으며, '05년 한해동안 우리나라의 각종 환경성과, 지표설정 및 달성도, 업무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환경성과 전반을 평가한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와 함께 OECD는 우리나라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음을 지적하며 총 54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권고사항은 다음의 공통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특정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관리가 우수한 반면 에너지, 교통, 농업 등 환경 관련 정책의 조정과 조화가 미흡한 점이다. 한국의 에너지, 물, 살충제, 비료사용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GDP 또는 면적 단위로 볼 때 OECD 국가들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곧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정책의 환경성 고려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일례로 한국의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OECD 국가들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프랑스보다는 2배, 일본보다는 1.5배나 높아 OECD는 차기 국가 기후변화대책에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시행될 차기 대책에 구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2013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큰 국제적인 감축 의무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 보조금 등 각종 경제적 수단들에 대한 환경효과를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녹색세계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메카니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0년대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조세개편(Eco-Tax Reform) 움직임이 확산되어 덴마크, 영국, 독일 등 7개 EU 국가에서 도입·시행중에 있다. 환경친화적 조세개편이란 에너지, 화

석연료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재화 및 서비스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세개편은 환경세 수입을 소득세, 연금기여금 등의 감면에 사용하여 세수중립(Revenue Neutral)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고용 창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에너지 분야의 환경세 도입이 제시된 바 있고, 현행 교통세를 “교통·환경·에너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부간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산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으며 그 결과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지만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발생된 오염을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 그리고 소비시스템을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더 적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고도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토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건전한 사회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에너지, 국토이용, 교통, 농업, 산림, 어업 등 각 분야별 정책에 환경성 고려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책들을 검토·개선하고, 아울러 지방정부의 환경역량 강화, 국민의 환경의식과 참여정신 함양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에 대한 단절적 사고에서 벗어나 양자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환경정책, 환경을 배려하는 경제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우리환경문제는 지난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한 환경오염물질의 감소만으로는 인류의 존망이 달린 환경문제가 극복되지 못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사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 환경성과평가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선진적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는데 노력해 나갈것이다.